

재정위기의 본질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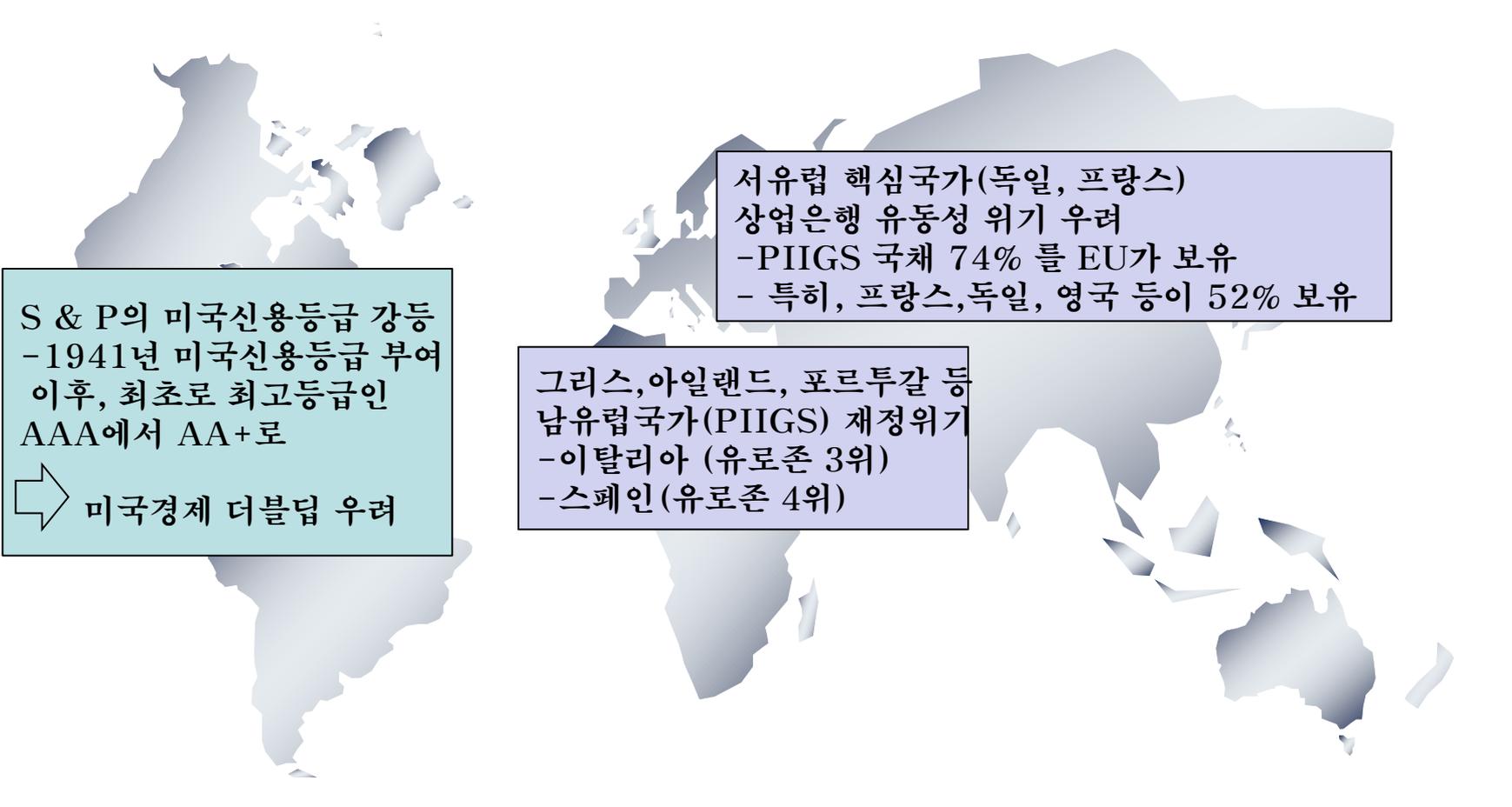
△ 사 회 : 오동진(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)

△ 발 표 : 장도중(한국신용평가정보노동조합 위원장)

- 일 시 : 2011년 9월 6일(화) 5시
- 장 소 : 한국노동사회연구소(KLSI)
- 주 최 : 한국노동사회연구소(KLSI)
- 후 원 : 한국에버트재단

1. 2011년 재정위기의 원인

■ 세계 재정위기의 3대 원인



S & P의 미국신용등급 강등
-1941년 미국신용등급 부여 이후, 최초로 최고등급인 AAA에서 AA+로

➔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

서유럽 핵심국가(독일, 프랑스)
상업은행 유동성 위기 우려
-PIIGS 국채 74% 를 EU가 보유
- 특히, 프랑스, 독일, 영국 등이 52% 보유

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 등
남유럽국가(PIIGS) 재정위기
-이탈리아 (유로존 3위)
-스페인(유로존 4위)

2. 2011년 재정위기의 배경

■ 미,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(Sovereign Risk)의 배경

○ 단기적 원인 -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부실자산(특히, 금융기관) 매입을 통한
시장 안정에 사용

○ 중,장기적 원인 - 저금리, 세수감소,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 재정
-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른 부채증가 속도
→ 재정 건전성 악화 지속

■ PIIGS국가의 CDS급등에 따른 주변국가의 CDS 상승

○ PIIGS국가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, 이탈리아, 프랑스 등 주변국가로 재정위기
전염 가능성

○ 유럽계 은행들의 CDS 급등

- 프랑스계 대형 은행 SG(Societe Genernal) 파산 루머
- PIIGS 국채(377억 유로) 최다 보유한 SG(92억 유로)와 함께 유럽 국채
(1,175억 유로) 최다 보유한 BNPP(411억 유로)등 유럽계 상업은행들의 위기감 고조

3. 2011년 재정위기의 본질

■ 유럽의 과도한 국가부채와 금융시스템의 악순환

○ 미국, 유럽의 2008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정책은

민간의 부실을 정부가 대신 부담 → 정부의 부담은 민간의 자생적
경기회복과 세수의 확대를 통해 경감

- 오히려, 경기 둔화와 세수감소로 인한 부채만 빠르게 증가

- 실제로는 국채 보유 금융기관 손실 확대 → 자금시장 경색 →

금리상승 → 실물경기 위축 → 세수의 감소 → 정부의 부실확대

라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

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- 더블딥에 대한 우려

○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, 미국 경제의 3대 지표인 고용, 소비, 제조업의
회복이 예상보다 느림

- 여기에 S&P의 신용등급 강등

- 미국의 재정정책이 확장에서 긴축정책으로 변경 불가피

————→ 더블 딥에 대한 우려

4. 우리 나라 경제는 ?

■ 과도한 국가부채(국가)

- 우리 나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, 대규모 토건사업 및 국책 사업으로 국가부채 급증(2010년 기준 GDP 대비 36.1%(407조), 2008년 30.1%, 공기업부채, 민간보증 등을 포함하면 130%(1,637조))
 - 일본(197.2%), 이탈리아(127.0%), 그리스(123.3%), 아이슬란드(108.8%)
미국(92.4%)

■ 세계 최고에 가까운 수준인 가계부채비율(민간)

-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876.3조로 우리나라 GDP대비 74.7%(우리나라 2010년 GDP/ 1,172조)
 - 개인가처분 소득 대비 146%(2008년 120%에서 급격한 증가), 미(120%)/영(160%)
은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감소추세, 집값 비싼 일본(110.7%)보다 높은 수준

■ 물가에 대한 우려

- 8월 물가상승율이 5%로 → 가계 실질소득 감소 → 이자 부담 → 금융기관 부실
→ 금융시장 위축 → 금리상승 → 경기침체

5.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의 비교

구분	2008년 금융위기	2011년 재정위기	1998년 외환위기
원인	○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(비우량 주택담보대출) 손실에 따른 금융권의 위기	○남유럽발 국가부채의 천문학적 증가 ○미국의 신용등급 강등	○국가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
진행	○대형 금융기관의 파산, 상업은행, 헤지펀드, 보험사 등의 파산 및 건전성 취약 → 유동성 위기 → 신용위기(대출감소) → 신뢰의 위기(주가 폭락)	○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증가 (재정 적자) → 그리스 등 국채보유 민간 금융기관 부실 →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침체 → 유럽금융기관 자금회수 + 안전자산 선호 → 주가 급락 우려	○ 동남 아시아의 외환위기 → 외국금융기관의 자금회수 → 대출만기연장 중단 → 대기업의 연쇄부도 → 금융기관 부실 → 달러 지속적 유출 → 대외신인도 하락 → 주가폭락
대책	○유동성 공급(긴급구제금융: 미국 총 7,000억 달러 규모) → 민간 부실을 국가 채무로 이전	○ 유로존 내에 재정부실국가 위험을 우량국가로 진행을 차단 → 국가 채무를 민간이 분담	○ IMF구제 금융 신청 → 금융기관 대규모 구조조정, 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

6. 노동조합 대응전략

■ 경제위기 시에는 구조조정, 정리해고 가능성 상존

- 기업 재무자료에 대한 분석 필요(실제 영업이익의 손실 여부 등)
- 경제위기 시에는 M&A가 빈발 → 무리한 정리해고 시행에 대한 대응
- 정리해고 요건 강화 입법 청원 운동 등

■ 실질임금 하락

- 경기침체기에는 실질소득 감소 가능성 → 임금인상보다는 복리후생을 높이는 전략 필요

■ 부자감세정책 및 친기업정책기조 대한 정책적 대응

-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채무만 급증 → 누진적 직접세 확대, 부유세 도입, 법인세 인상

■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사전적 대응

- 과도한 예대마진 정책에 대한 비판, 건설 사업에 지나친 대출 정책비판
- 금융거래세 도입 등